

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 특별 결의문(안)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과 이 회 창 후보의 지역분열 책동이 표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간의 화합을 간절히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실망은 극에 달해 있다.

최근 한나라당 서 청 원 대표의 “목포 앞바다에 민주당을 버리자”는 망언은 2001년 6월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목포 앞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정권을 쟁취하려는 만행에 대해 격분을 참을 수가 없다.

또한, '93년 김 영 삼 정부가 전남도청 이전사업을 결정하여 전남도민의 협조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은 광주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10월 23일 “도청이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지역문제를 이용하여 광주·전남을 이간시키려는 무서운 음모에 대해 경악 할 따름이다.

더욱이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지역의 균형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모색해도 여력이 부족할 시점에 한나라당의 작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박 광 태 광주시장, 광주 일부 국회의원, 일부 언론 등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한나라당의 음모와 광주시장 및 일부 인사들의 부화뇌동에 침통함을 느끼며 목포시민, 전남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전남도청 이전사업을 대선 정략으로 악용하여 광주·전남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 리 의 결 의

1.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한나라당 서 청 원 대표는 즉각 정계에서 물러나라.
1. 한나라당 이 회 창 대선후보는 대선정략에 지역문제를 악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1. 박 광 태 광주시장과 광주 일부 국회의원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전남도민에게 사과하라.
1. 앞으로도 도청이전 사업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다면 전남도민과 함께 목

포시민들은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0월 26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인